

동베를린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본 냉전시기 한국-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정치외교관계 분석

- 독일외무성 정치문서고와 독일연방문서고의 기밀해제자료들을 중심으로

성상환*

[목차]

1. 도입
2. 동베를린 사건 조명의 의의
3. 동베를린 사건의 전개과정
4. 동베를린 사건의 해결과정
5. 마무리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1. 도입

본 글은 독일연방공화국의 정부문서고에 있는 한국관련 외교문서를 바탕으로 정치외교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동베를린 사건(동백림사건)을 조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독일에 있는 한반도 관련 자료들은 연방차원에서 여러 문서고에 흩어져 있는데 예를 들면 베를린의 외무성 정치문서고와 각 지역의 연방문서고 및 기타 정당문서보관소에 있는 자료들을 들 수 있다. 특히 이 자료들 중에서도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와 관련된 외교, 정치문건들은 현대 한국사연구에 풍부한 내용을 제공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독일 외무성 정치문서고의 한국관련 자료들을 우선 검토의 대상으로 삼고

* 서울대학교 독어교육과 교수/서울대학교 교육융합연구원 겸무연구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제한국학센터 소장 (sseong@snu.ac.kr)

특히 60년-70년대 초에 주목을 받았던 동베를린 사건을 중심으로 당시 독일에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처리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독일연구의 영역에서도 한반도와 독일사이의 교류사를 독일의 공식 정치외교 문서를 통해 새롭게 볼 수 있는 독특한 시각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동베를린 사건과 관련하여 이정민(2014)은 한국 정부의 자료를 중심으로 한 양준석(2009)의 연구가 동베를린 사건 자체를 학술영역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최초의 연구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사실 독일연방공화국의 외무성 정치문서고의 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최초의 동베를린 사건 연구는 Seong(2005)을 들 수 있다. 또한 이정민(2014)은 양준석(2009), 김명섭/양준석(2013)의 연구를 보완하면서 이 연구들이 당시 동베를린 사건과 남한과 북한과의 첨예한 시대적 갈등상황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추정된 인과관계에 집중한 것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이정민(2014)의 연구는 독일 외무성 정치문서고 자료를 중심으로 '서독정부 주권침해 논란을 둘러싼 외교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이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은 이미 Seong(2005)에서 독일외무성의 해당 자료를 중심으로 해제가 되어있다. 그러나 이정민(2014)의 연구는 독일자료 이외에도 최근에 나온 국내 추가 자료들의 내용도 함께 반영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다만 이 연구에서 1967년 말부터의 자료들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미완점이 있다. 또한 냉전이 절정으로 달했던 50-60년대 북한과 구동독간의 외교와 경제협력관계를 다룬 성상환(2010)도 당시 동베를린 사건이 일어났던 시대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Seong(2018)은 한국전쟁 이후 1980년대까지 냉전시대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와 양 독일(동서독) 간의 정치외교관계를 독일정부사료를 바탕으로 개괄적으로 정리하면서 동베를린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일어난 본 사건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당시 한국대사관과 중앙정보부에서 파견된 사건 관여 인사들의 구체적인 개입내용들을 새로이 발굴하고 사건 발생 후 현지 대사관을 중심으로 한 한국 정부의 미숙한 외교적인 대응방식과 독일 연방정부 측에서 주권침해와 관련하여 단계적으로 검토한 외교적인 내용들을 추가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부분은 동베를린 사건과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2. 동베를린 사건 조명의 의의

한국전쟁 이후 한국과 독일연방공화국(구서독)이 국교를 수립한 이후 외교관계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부담이 되었던 사건은 역시 동베를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독일 측 외교문서에는 독일영토에서 따로 비자가 필요 없는 관용여권으로 입국한 한국의 정보요원들이 독일 연방정부가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국적자들을 독일 연방정부에 어떤 사전 동의나 아무런 설명 없이 납치해 간 것은 독일연방공화국의 주권을 침해하며 국제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이 조치에 대해 독일 정부는 한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며 독일이 법치국가이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명백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이에 대응하는 당시 한국 정부의 입장들이 잘 밝혀져 있다.

특히 우리는 당시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은 민감한 독일 측의 내부입장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문서목록에는 또한 외국정보기관에 의해 주권을 침해당한 독일정부가 당시 어떠한 외교 전략을 구사했으며 이러한 외교 전략을 구사하게 된 배후 상황이 잘 기술되어 있고 독일 연방의회차원에서 사안을 해결해 보려는 노력들, 양국 최고위급 인사들의 서신교환내용, 독일 연방정부 내 관련 부서들 간의 다양한 대응논의들, 수많은 학술단체, 문화단체, 예술단체, 대학과 민간연구소, 인권단체, 정부-민간경제협력단체의 사안에 대한 입장들이 잘 나타나 있다. 이 사건은 한국과 독일연방공화국 양국 사이의 외교관계에서 가장 불행한 역사로 알려져 있고 그렇지만 관련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라는 맥락을 떠나서 당시의 독일 측 공식문건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지난 50년 전의 역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또한 언론에 알려져 있지 않은 두 정부 간의 물밑 접촉의 과정도 추적함으로써 한독관계사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3. 동베를린 사건의 전개과정

동베를린 사건이 독일외무성 정치문서고나 연방문서고의 문건에서는 ‘납

치된 한국인들' verschleppte Koreaner, Verschwinden koreanischer Staatsbürger aus der Bundesrepublik, Entführung von Südkoreanern aus der Bundesrepublik이라는 제목의 문서목록으로 나타난다.¹⁾ 동베를린 사건은 67년 4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실종된 이길양 기자 사건이 촉발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²⁾ 1967년 6월 독일연방공화국에서 한국 국적자 17명이 갑자기 사라진 사건이 발생하고 난 후 독일 연방정부 내부에서는 외국정부의 정보기관원들로부터 주권을 침해당한 이 사건을 다루기 위해 여러 부서들이 총동원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관련 문건들을 보면 비스마덴 Wiesbaden의 독일연방범죄수사국 Bundeskriminalamt, 본 Bonn의 연방법무성, 내무성, 외무성, 칼스루에 Karlsruhe의 연방검찰청 Generalbundesanwalt, 본의 연방총리실, 연방대통령실,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Nordrhein-Westfalen 주 경찰청 등이 긴밀히 사안의 조사와 처리에 대해 협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1967년 7월 4일 최초로 등장하는 외무성 문건에는 본의 지방경찰청의 조사에 의거 13명(최종적으로 아동 1명을 포함한 17명)의 한국 국적자들이 갑자기 실종되었으며 본의 한국대사관으로 소환된 후 이후 행적을 알 수 없다고 나와 있다.³⁾ 독일경찰 측의 조사에 따르면 이 당시 갑자기 사라진 한국 국적자들의 숙소에는 그들의 여권과 여행용 가방 등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 그리고 독일당국의 보고서에는 독일에 남아있는 사라진 한국인들의 지인들이 갑자기 종적을 감춘 당사자들이 파리에서 보낸 육필로 쓴 항공우편 편지들을 받았는데 이 편지들에는 한국으로 이들이 갑자기 귀국한다고 나와 있었다고 한다. 현지 경찰청의 조사에 의하면 본 주재 한국대사관 소속의 고위외교관인 양두원 Du Won Yang 참사관(본래 중앙정보부소속)이 이 사안에 깊이 관여되어 있고 대략 정보요원이

1) PA/AA. Bestand 83, Band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Juli 1967-1970)(다른 문서고가 아니면 이하 PA/AA[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독일외무성정치문서고]는 문서고 지칭 시 약자를 생략함.)

2) Bestand 83, Band 948, Band I. IB5-82.70/92.23 Bonn, den 11. Juli 1967.

3) Bestand 83, Band 948, Band I, Protokoll. Betr.: Verschwinden koreanischer Staatsbürger aus der Bundesrepublik, Bonn, den 4. Juli 1967.

나 경찰관들로 추정되는 40여명의 한국기관원들이 한국에서 투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록되어 있다.⁴⁾

그리고 7월 5일 독일연방 외무성장관실에서 나온 문건에는 마인츠지역 독일사민당 SPD 연방의회의원인 카프카 Kaffka씨가 외무성에 전화를 하여 마인츠대학의 소아과 의사로 있는 이수길 박사가 납치되었고 이 사안에는 한국대사관 참사관인 양두원을 포함 3명의 한국인이 연루되어 있으며 이 한국인 의사의 부인은 다음 날 남편으로부터 급전을 받게 되는데 이 편지에는 은행통장 Sparkassenbuch과 함께 남편이 갑자기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⁵⁾ 며칠 뒤 이 부인은 한국대사관으로부터 남편이 상당 기간 서울에 머물게 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되어있고 마인츠대학 병원 소아과과장은 이수길 박사가 무단으로 이틀간 결근을 하자 봉급을 동결해 버리고 열흘 뒤에는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게 된다.

이수길 박사가 자택으로부터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평소 이수길 박사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양두원 참사관이 중앙정보부요원 2명을 대동하여 허위로 구실을 만들어 접근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양두원은 이수길 박사가 식사 후 자신의 자동차로 인근 바 Bar로 이동하는 대신 일행들과 본 근처의 바트 노이에나 Bad-Neuenahr의 카지노로 갈 것을 제안했다. 이곳을 방문한 후 양두원은 이수길 박사에게 바트 노이에나 기차역이 아니라 본까지 같이 가서 그곳에서 기차로 마인츠 Mainz로 이동할 것을 제안했고 이수길 박사는 이에 동의한다. 그러나 양두원은 자동차로 바로 본 한국대사관으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이수길 박사는 바로 또 다른 중앙정보부요원들에게 연행되고 만다. 사건초기에 이수길 박사와 함께 무혐의로 풀려나 독일로 조기귀국하게 되는 박성조 박사와 배추자 간호사도 유사한 속임수를 통해 대사관으로 연행되었음이 독일 연방경찰청의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다.⁶⁾

4) 상동: 이후 문건에는 최종적으로 20명의 한국정보기관요원들이 6월 10일에서 6월 20일 사이에 독일연방공화국에 도착하였다고 나온다.(Bestand 83, Band 948, Band I, Abteilung V V4-88-5777/67, Bonn, den 20. Juli 1967)

5) Bestand 83, Band 948, Band I. Brief von Herrn Arnold an Herrn Staatssekretär Schütz, Ministerbüro, Bonn, den 5. Juli 1967.

한국대사관의 양두원 참사관은 1967년 6월 17일 또한 당시 슈투트가르트에서 활동하던 태권도사범인 김광일에게 임무를 맡겨 슈투트가르트의 이탈리아출신 운전수인 안토니오 디라도 Antonio Dirado를 고용하여 자동차를 임대하여 뮌헨에서 박사과정 중에 있던 김택환을 본 대사관으로 소환하도록 지휘했다고 나와 있다.⁷⁾

그리고 이 문건에는 본의 한국대사관이 슈피겔 Spiegel 편집진에 실종된 14명의 한국인들은 남한 정부에 적대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한국에서 법정에서 서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고 나온다.⁸⁾ 또한 독일연방외무성 IB5이 7월 6일 본 주재 한국대사관에 보낸 구두각서 Verbalnote에는 독일 측 조사에 바탕을 둔 실종자 명단과 이들의 처소에서 가방이나 개인여행용품들, 여권 등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지인들에게 알림도 없이 사라진 것이 강조되어 있고 이에 대해 한국 측의 즉각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⁹⁾

독일 측은 국제법을 위반하며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한 한국대사관의 외교관들을 문제 삼게 되고 한국대사관은 독일연방공화국의 주권을 침해한 이유로 독일 측의 요구에 따라 양두원 참사관, 이효석 노무관, 최철호 노무관을 본국으로 귀환시킨다(persona non grata).¹⁰⁾ 한국대사관소속의 외교관 3명이 독일정부로부터 추방당하게 되는 이러한 결정은 1967년 7월 21일 독일연방의회의 외교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었다. 독일 측에서는 또한 이 납치사건에 관여하게 된 독일광산의 한국인 근로자들과 한국인 태권도사범도 체포, 조사하게 되었고 독일 연방정부 외무성과 내무성,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내무성과의 부서 간 논의에서도 본 주재 한국대사관의 외부차량과 출입인통제, 그에 따른 국제법상의 문제점 등이 논의되고 있었다.

6) Bestand 83, Band 948, Band IV. V4-88-5777-67. 연방법무성에서 연방외무성으로 보낸 연방검찰청보고서. 4043 E(10)-95/67 VS- den 25. Juli 1967.

7) Bestand 83, Band 948, 1967년 7월11일 연방검찰총장실 보고서 참조

8) Bestand 83, Band 948, Band I. Brief von Herrn Arnold an Herrn Staatssekretär Schütz, Ministerbüro, Bonn, den 5. Juli 1967.

9) Bestand 83, Band 948, Band I. Aide Mémoire, Bonn, den 6. Juli 1967.

10) Bestand 83, Band 948, Band II. Abteilung V. V4-88-5777/67 Bonn, den 20. Juli 1967.

이 사건이 발생한 뒤 양국 간의 고위인사들의 회동은 7월 6일 서독외무성 차관 Staatssekretär과 당시 독일연방공화국 주재 한국대사인 최덕신과의 사이에 있었는데 7월 7일 외무성 기록(Aufzeichnung ZA5-92.A/67)을 보면 독일외무성 차관은 사안에 대해 한국대사에게 합당한 설명을 요구했고 최덕신 대사는 상황이 이렇게 불쾌하게(unerfreulich) 전개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의 뜻을 전하고 있다. 최덕신 대사는 본국의 설명에 의거하여 한국으로 귀국한 자들은 동베를린에 거점을 둔 공산주의 단체와 연계되어 반국가적 행위를 하여 한국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 자신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귀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파견된 요원들도 보통 사람들이 예상하듯이 공관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본 주재 한국대사관과는 별개로 활동했고 한국으로 귀환한 당사자들을 직접 접촉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 연방정부가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최덕신 대사 자신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¹¹⁾. 이 회동에서 외무성 차관은 이 사안에 대해 독일 측의 여론이 너무 악화되어 있고 한국 측으로부터 더 상세하고 조속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¹²⁾

7월 6일 본의 한국대사관이 발표한 보도 논평에도 대사관은 이 사안에 대해 관여하지 않은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 사건의 내용을 본국의 한국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독일 측의 조사와는 달리 한국대사관은 독일에서 6월의 3째, 4째 주 2주간 동안 17명의 한국 국적자들(어린이 1명 포함)이 자발적으로 귀국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¹³⁾ 그러나 1967년 7월 6일자 독일 외무성의 비망록(Aide Mémoire)에 따르면

11) 이 사건이 외교적인 마찰로 번지자 최덕신 대사는 곧 사임을 했고 독일 본 주재 한국대사로 김영주 대사가 부임하게 된다.

12) Bestand 83, Band 948, Band I. Aufzeichnung ZA5-92.A/67.

13) Accordingly they have returned to Korea of their own will; the allegations that they were taken against their will is far from the truth. 독일 측의 구두 각서(Verbalnote)에 대한 대사관의 답변에는 서울로 소환된 한국인들이 2-3일간 간격을 두고 Hamburg에서 여러 다른 항공편들(JAL, LH, AF)로 출국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일본항공(JAL)의 경우는 일행이 다른 일반승객보다 따로 먼저 탑승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한국대사관에서 제시한 귀국자들의 명단에 나타난 인사들이 갑자기 독일을 떠나게 된 것에 대해 독일 여론이 매우 악화가 되어 있으며 독일 측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언급된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다는 한국대사관 측의 설명에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입을 수 있고 특히 해당 인사들의 소지품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한 인사의 경우 가택 수색에서 현금과 여권이 고스란히 남은 상태여서 이들이 갑자기 떠나게 된 배경을 전혀 이해할 수 없으며 이들이 어떤 식으로든 한국으로 귀국하겠다는 의도를 결코 나타낸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¹⁴⁾ 그리고 독일 연방정부는 한국 측에 대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의문점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이 내용은 서울 주재 독일대사관에도 보내어 졌다.¹⁵⁾

1. 왜 명단에 나와 있는 인사들이 갑자기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나?
2. 이 인사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나?
3. 해당 인사들의 갑작스런 출국이 이들이 한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이루어진 모종의 한국 국적자들의 독일 방문과 연관성이 있는가?
4. 어떤 경로로 언제 이들의 출국이 이루어 졌나?

이 당시 본의 한국대사가 독일연방외무성에 제시한 답변들 중 한국에서 공무원여권으로 독일로 온 기관원들이 한국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대사관과는 별개로 활동했다는 내용은 이 당시 이미 빠르게 진행되고 있던 독일연방검찰 측의 조사내용을 검토했을 때 거짓으로 판명이 난다. 이를테면 1967년 7월 7일 최덕신 대사의 독일외무성에서의 해명과는 달리 1967년 7월 11일과 7월 26일자 독일연방검찰청의 조사보고서에는 이미 본 주재 한국대사관의 참사관(양두원), 노무관(이효석, 최철호), 2등 문정서기관(최태준), 3등 행정서기관(안현원), 학생이면서 대사관에 고용되어있던 신정계, 통역사 최기식 등 여러 명의 한국 외교관들과 이들의 지시를 받은 한국 국적자들이 중앙정보부요원들에 협조하면서 총 17명의 한국인들의 납치사건

14) Bestand 83, Band 948. I. Aide Mémoire. Bonn, den 6. Juli 1967.

15) Bestand 83, Band 948, Aide Mémoire. Bonn, den 6. Juli 1967.

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¹⁶⁾ 또한 이 문건에 따르면 이에 관여한 민간인 교포로서 태권도사범과 광산근로자 등 2명이 7월 7일과 7월 8일 각각 독일 경찰에 체포된다. 이러한 독일 측의 객관적인 조사내용은 한국정부와 본 주재 한국대사관의 설명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7월 10일자 본의 한국대사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독일외무성 행정차관과의 만남에서 한국 측 대사는 7월 6일자 독일 측의 사안에 대한 외교비망록에 답변하면서 북한 측이 이미 특정 독일인을 통해서 독일연방공화국에 살고 있는 한국 국적자에게 곧 있을 체포에 대해 경고하며 피신하라는 편지를 전달했다고 이 김아무개라는 당사자의 6월 21일자 증언을 언급하고 있다.¹⁷⁾ 이러한 한국대사의 입장표명이 의미하는 바는 독일연방공화국내의 한국 국적자들의 한국정부에 대한 전복 활동과 간첩활동이 동베를린에 있는 북한대사관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한국대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필수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번 사안에서 한국 측은 전혀 독일의 법에 저촉되거나 독일의 자주권에 해가 되는 어떤 조치를 의도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으로 독일연방 정부와 독일국민들에게 불안을 야기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에 관련된 한국인 교포 2명이 독일 당국에 체포된 사안에 대해 대사관의 우려를 전하고 있다. 이 내용은 독일 외무성 장관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나와 있다.¹⁸⁾

이 사건과 관련하여 독일연방 범죄수사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동독의 선전매체 라디오방송인 독일자유방송(Deutscher Freiheitssender 904)이

16) Bestand 83, Band 948. Band I. E III Bericht von Scheicher KOK Bad Godesberg, den 11. Juli 1967. 그리고 Bestand 83, Band 948, Band II. Abteilung V V4-88-5777/67 Bonn, den 20. Juli 1967. 참조.

Bestand 83, Band 950. 1 BJA 28/67. 독일연방검찰청이 연방법무성장관에게 보낸 보고서. Karlsruhe 26. Juli 1967.

17) Bestand 83, Band 948. Vermerk den 10. Juli 1967. Betreff. Verschwinden südkoreanischer Staatsangehöriger au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8) Bestand 83, Band 948. Vermerk den 10. Juli 1967. Betreff. Verschwinden südkoreanischer Staatsangehöriger au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연방수사국(서독)의 수사단이 한국 국적자들의 납치연행에 관여했다는 거짓 정보를 방송했다고 기술되어 있다.¹⁹⁾ 이는 당시 동독매체가 거짓 라디오 보도를 통해 동베를린 사건과 관련하여 독일 연방정부의 입장을 불리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당시 독일연방내무성장관이 독일연방 법무성장관에게 보낸 문건에 의하면 한국 정부가 관련된 이 사안에 즈음하여 독일정부는 외국정보기관의 독일연방 내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적인 제도보완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외국정보기관의 독일연방공화국 내 활동을 금지시키거나(스위스모텔) 혹은 등록을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 등(미국의 경우) 외국사례들을 언급하고 있다. 당시 독일연방 내무성장관은 외국정보기관의 독일 내 활동을 불법으로 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²⁰⁾

당시 한국 국적자들의 한국으로의 귀환은 동베를린의 북한대사관의 방해를 사전에 피하기 위해 은밀히 진행되었다고 하며 귀환자들은 설득에 의해 자발적으로 한국으로 귀국했다는 본 주재 한국대사관의 입장과는 달리²¹⁾ 독일 측의 자료들에 나타난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 한국 정부는 한국 국적자들을 귀국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술책, 협박과 한국의 가족문제들을 결부시킨 회유와 같은 방법들을 동원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²²⁾

일종의 속임수를 통해 해당 인사를 한국으로 귀국시키려고 시도한 경우도 외교 사료에는 언급되고 있다. 1967년 7월1일 서베를린에서 공부하고 있던 한 유학생은 어떤 전시회에서 한 한국 남성으로부터 한국의 고향에 가도록 해주겠다고 루프트한자에 항공권이 있으니 우선 본으로 날아가도록

19) Bestand 83, Band 948, Band II: Hans Wolf Kriminalkommissar 보고서, Bad Godesberg, den 12, Juli 1967

20) Bestand 83, Band 948 I, VI A 1-601 428/1 Schreiben des Bundesministers (Lücke) des Innern an den Bundesminister der Justiz. 10. Juli 1967. Betreff: Verbot der Tätigkeit ausländischer Nachrichtendienste in der Bundesrepublik.

21) Bestand 83, Band 948. I. Aide Mémoire der koreanischen Botschaft. Bonn, den 10. Juli 1967.

22) Bestand 83, Band 948. II. V 1-88. Botschaf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Seoul. Seoul, den 20. Juli 1967.

초대를 받는다. 그러나 이 학생은 본의 한국대사관에 도착 후 심문을 당하게 되고 한국으로 귀국하기를 거부하자 대사관에 감금되었다. 이 유학생이 다음날 베를린으로 보내어 달라고 심문한 요원들에게 부탁하자 한국대사관 소속의 3명의 남성들이 그를 로하우젠 Lohausen으로 데려가던 중 극적으로 탈출하게 된다. 이 유학생은 7월 3일 동료의 정보를 통해 자신이 다시 감금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답을 받고 한국대사관으로 가서 그가 빼앗긴 여권을 돌려달라고 하지만 대사관으로부터 거부당한다. 이러한 사건들은 독일 내 여론을 악화시키고 독일 대학생들의 시위를 촉발시키며 결국 본 Bonn 대학의 한국 학생들은 독일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게 된다.²³⁾ 독일 본 대학 측은 한국 유학생들의 거처를 따로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이 문건에는 당시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던 미국의 비밀정보기관 요원(ein Verbindungsmann)이 독일 측에 서울에서의 상황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독일 당국이 실종 당사자들의 가택 수색을 실시했는데 두 군데에서 공기펌프에 감추어진 난수표와 2000달러의 돈을 발견했다는 것이다.²⁴⁾ 또한 독일 측에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의 정보기관요원은 동베를린 사건에서 실지 고전적인 의미에서 스파이조직의 운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다만 본 주제 미국대사관에서는 독일 외무성에 동베를린 사건과 관련하여 독일 언론 보도와는 달리 한국 국적자들이 한국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정보요원들이 미국의 도움을 받았거나 하는 내용은 근거가 없으며 미국은 이 사건과 어떠한 관련도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²⁵⁾

독일 측은 기본적으로 납치된 인사들의 조속한 석방과 완전한 귀환을 요구했는데 이러한 강경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설상가상으로 당시 한국의 외무부장관이었던 최규하는 1967년 7월 19일 서울에서의 기자회견에서 이 사

23) Bestand 83, Band 948 I, IB5-82.70/92.23 Bonn, den 11. Juli 1967.

24) Bestand 83, Band 948. I. Bundeskriminalamt SG/E III 99/67. Bad Godesberg, den 12. Juli 1967. Bericht vom 10.7. 1967, Bad Godesberg: Nach Mitteilung des Auswärtigen Amtes soll sich in zwei Wohnungen Agentenmaterial befinden. Im einzelnen handelt es sich um einen Geheimcode, der in einer Luftpumpe versteckt sein soll und um 2000 US-Dollar Agentengeld.

25) Bestand 37, Band 416. IB5-82.70/92.13. Bonn, den 5. Jan. 1968

건의 당사자들 17명은 한국의 기관원들에게 협조를 했고 자발적으로 귀국했다고 발표를 했고 이 입장은 본의 독일 연방정부를 전혀 만족시키지 못했고 독일 전역에서 대학과 학생회, 학술, 문화단체들의 거센 항의를 촉발시키게 된다.²⁶⁾

한편 한국 정부는 당시 국내의 언론을 통해 한국 정부는 독일 연방정부에 두 나라가 전 세계의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투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논리를 강조하고 있고 공산주의에 대항한다는 공동이념이 이 불행한 외교적인 사안을 해결하는데 한국 측이 독일 측으로부터 이해를 구하기 위한 중요한 대의명분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한국 언론에서는 본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희망을 표명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독일 연방정부에게 독일연방공화국에서의 북한간첩망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요청한다고 보도가 되었다. 또한 독일연방공화국이 한국과 반공정책을 같이 펴는 우방으로서 현 상황을 이해하기를 원한다고도 나와 있다.²⁷⁾ 그러나 서울주재 페링 Ferring 독일대사가 외무성에 보낸 문건을 보면 독일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반공법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독일 외교관들의 눈에는 한국의 정부 당국이 서구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절차를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고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페링 대사는 본의 독일 연방정부가 독일 내 여론과 언론을 활용하여 한국 정부를 더 강하게 압박해서 경제 원조를 중단하는 것보다 한국 정부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전략이 더 유효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있다.²⁸⁾ 이후 나타나는 페링 대사의 보고서에는 사건 발발 이후 서울의 분위기가 잘 나타나 있는데 독일 유학출신의 한국 지식인들과 학자들 사이에는 아주 냉랭한 불신의 분위기가 감돌고 있음을 느낄 수 있고 연행된 후 풀려난 경우에도 당사자들이 감금된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해 함묵하는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독일로 귀환한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그러하였다.

26) Bestand 83, Band 948 II. V 1-88. Botschaft der BRD Seoul, Seoul, den 20. Juli 1967.

27) Bestand 83, Band 948, V4-88-5777/67 Bonn, den 12. Juli 1967.

28) Bestand 37, Band 416, IBS 82.70.92.93, V 1-88/99/68 주한독일대사가 본 외무성에 보낸 보고문 Feb. 23. 1968.

이러한 냉전적 상황적 논리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은 이미 한국에서의 당사자들에 대한 재판과는 별도로 독일에서의 사태가 초기부터 견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독일 내의 언론 보도와 여론이 너무 악화되자 1967년 7월 24일자 외무성에 보낸 대사관의 구두각서 Verbalnote에서 한국의 기관원들이 독일 연방정부의 동의도 없이 독일연방공화국의 영토에서 불법적 활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있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²⁹⁾ 7월 10일자 한국대사관에서 독일 외무성으로 보낸 외교비망록에는 한국기관원들이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비밀리에 급하게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독일 연방정부의 이해를 구하고 있다.³⁰⁾ 무엇보다도 독일의 입장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독일의 주권이 자국의 영토 내에서 외국의 기관원들에 의해 무참히 침해당했다는 것이었고 한국 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독일 연방정부는 초기부터 이러한 심각한 외교적 마찰과 주권침해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한국으로 연행되어 간 당사자들이 모두 석방되고 독일로 귀환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명백히 했고 이렇게 함으로써만 양국 간의 외교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원칙을 고수했다. 이후 나타나는 문건들에는 독일 연방정부가 외교적 입장의 수위를 높여 가고 있으며 대한국 원조 개발건(영남 2호 화력발전소 지원 건)과 인력송출(광산근로자, 간호사 등)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실 인력송출의 경우 1968년의 경우 아래 <표 1>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갑자기 송출 인원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독광부 45년사: 1963-2008. 재독한인글뤽아우프회, 2009).

29) Bestand 83, Band 948, Band IV IB5-82.70/92.23

30) 한국대사관에서 독일외무성으로 보내어진 문건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당시 한국 정부는 1957년 동베를린에 세워진 구동독 주재 북한대사관의 활동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기록을 보면 1958년부터 1967년까지 상당수의 남한 국적자들이 동베를린을 방문하고 또 일부는 평양까지 1-2회씩 방문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들은 평양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금전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표 1> 독일연방공화국으로 송출된 한국인 근로자 통계

년도	총인원	간호사 및 간호보조원	광산근로자
총계	17,986	10,032	7,936
1963	247	-	247
1964	846	-	846
1965	1,198	18	1180
1966	1,513	1,227	286
1967	428	421	7
1968	94	91	3
1969	847	837	10
1970	3,022	1,717	1,305
1971	2,345	1,363	982
1972	1,520	1,449	71
1973	2,024	1,182	842
1974	2,386	1,206	1,088
1975	459	459	-
1976	376	62	314
1977	795	-	795

독일 외무성의 관련 문건들은 이 당시 독일 연방정부가 이 사건으로 인해 여론과 연방의회로부터 엄청난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당시 연방총리는 쿠르트 키징어 Kurt Kiesinger, 외무성장관은 빌리 브란트 W. Brandt였다).³¹⁾ 당시 서류들을 보면 독일 언론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뉴욕 타임즈나 유럽의 프랑스, 노르웨이 등의 언론들도 이 사건의 추이를 면밀히 보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련 독일문건에는 독일연방공화국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8명의 한국 국적자들이 사라졌고,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 Salzburg에서도 1967년 6월 29일 이후 35세 공광덕이라는 유학생 한 명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³²⁾

31) Bestand 83, Band 949. Aufzeichnung ZA 5-104A/67, den 24. Juli 1967.

32) Bestand 83, Band 948. I. IB5-82.70/92.23 Bonn, den 11. Juli 1967.; Bestand 83, Band 948. II. V4-88-5777/67, den 13. Juli 1967.

4. 동베를린 사건의 해결과정

독일 외무성과 연방의회 사이에 오고 간 문건들을 보면 독일 연방정부의 외교적인 사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시대적인 사건이 동베를린 사건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967년 8월 25일자 독일연방의회 의원인 베헤르트 교수 Prof. Dr. Karl Bechert는 연방외무성 장관에 보낸 편지(IB5 82.70, 92.23)에서 한국인 납치사건과 관련한 독일 정부의 한국에 대한 제반 조치들과 관련하여 1963년 2월 26일에 발생했던 프랑스 극우파 극단주의자인 앙뜨완 아르고 Antoine Argoud의 경우를 언급하고 있다.³³⁾ 이 사건의 경우 당시 프랑스 정보부 요원들이 독일 당국과의 협의 없이 아르고를 뮌헨에서 체포하여 프랑스로 납치, 이송했는데 이는 양국 사이에 심각한 외교적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독일 연방정부가 엄청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1964년 1월 2일 프랑스정부는 아르고의 인도를 최종적으로 거부하게 된다. 당시 독일 연방정부는 이 사건으로 전후 점령국이자 이웃 나라인 프랑스의 외교상 불법행위에 의해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된다(*Wir sind immer noch ein besetztes Land*; '우리는 아직도 [외국군대에 의해] 점령당한 국가이다'). 베헤르트의원은 외무성 장관에게 이 사건을 상기시키며 독일 정부는 한국이 어떠한 상황적, 외교적 구실을 대거나 저질러진 일에 대해 용서를 구하더라도 독일에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물러서면 안 된다고 충고하고 있고 소환된 17명의 한국인을 독일로 다시 불러오는 방법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³⁴⁾ 이에 대해 외무성은 연방정부가 한국에 대한 원조프로젝트들(Entwicklungshilfe)을 동결하거나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답하고 있고 이미 6명의 당사자들이 독일로 귀환했으며 나머지 한국인들도 귀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67년 10월 3일자 답변).

그러나 한국에서 사건관련자 몇 명에게 2심에서 1심보다 더 형량이 높은

33) Bestand 83. Band 948. I. Aufzeichnung V4-88-5777/67, Bonn, den 11. Juli 1967.

34) BA. Bundesarchiv/Bundespräsidialamt. B122, 5484. 1967-69: Referat 2. den 13. Dez. 1967

사형이 언도된 직후 사태는 더욱 악화된다. 1968년 4월 26일자 외무성의 기록(Aufzeichnung, V4-88-5777/67)에 보면 외무성국장인 트루켄브로트 박사 Dr. Truckenbrodt와 한국대사관 소속 경제참사관의 대화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한국대사관의 경제참사관은 왜 독일이 한국에 제공키로 한 화력발전소의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느냐고 물으며 한국 정부는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현재 놓여 있는 외교적 문제와 경제원조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변하고 있다. 독일 측은 이에 대해 한국이 독일연방공화국의 법률을 위반했고 여론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맞선다. 그리고 한국 참사관은 최근 미국 워싱턴의 세계은행문그룹회의의 Weltbank-beratungsgruppe Korea에 다녀오는 길이라고 설명하고(이 회의에 독일연방공화국은 빠짐) 그곳에서 미국장관 맥나마라 McNamara가 한국의 경제발전 기적에 감탄을 했고 많은 다른 국가들도 한국의 발전을 인정했다고 전하면서 미국과 프랑스에서도 한국의 정보기관원들이 관련 인사들을 소환해 갔는데 이 국가들은 전혀 그 이후에도 한국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왜 유독 독일연방공화국만 대한경제원조와 외자 대출(7천만 마르크의 재정지원), 그리고 보증문제를 현 사안의 재판문제와 결부를 시키는지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이해를 못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더 이상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한국경제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독일 외무성 정치문서보관소의 자료에는 독일에서의 한국 중앙정보부(KCIA) 요원들의 활동에 대한 1968년 1월 독일 언론의 보도에 한국 정부는 유감을 표시했다고 나와 있는데, 동베를린 사건으로 인한 한독간의 분쟁들, 일부 기술 원조 중단, 동베를린 사건에 미국이 개입되었을 가능성 등이 언급되어 있다. 독일 연방정부는 마지막으로 앞서 3절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에 이미 약속했거나 당시에 진행 중인 개발원조 프로젝트를 중단시키고 광산근로자들의 취업도 중단시키는 조치 이외에 한국 정부에 더 큰 압박을 가하는 방법으로 외교 관계를 단절하는 수준까지도 고려하고 있었다.³⁵⁾ 또한 이 사료에는 당시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과 독일의 뤼프케

35) Bestand 480, Band 37; Bestand 37, Band 416, 82.70.92.23.

Lübke 대통령 사이에 오고 간 비공개 서신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두 정상 사이에는 이미 상호방문을 통하여 서로 우호적 관계가 조성되어 있었고 결국 간첩죄로 기소된 해당 인사들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할 것이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다.³⁶⁾ 또한 1968년 1월 서울주재 외국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한 신년 하례식을 기해 박정희 대통령과 독일 대사 페링의 대화에서는 박대통령이 "불행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이 끝나면 사면권을 사용하겠다고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³⁷⁾ 한국주재 미국대사관이 이 사안과 관련하여 서울과 본 사이를 중재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자료들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국제적인 스캔들로 비화한 동베를린 사건은 당연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대외선전에 활용할 수 있는 호재였음에 틀림없다. 당시 구동독 DDR의 외교문건에는 박정희정부와 미국의 반공정책을 비난하는 북한의 공식 성명서도 등장하는데 분명히 이 정치적 사건은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할 충분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³⁸⁾ 또한 1968년 1월 북한 무장병력이 청와대를 습격하려던 사건과 같은 달 발생한 미국의 정보함인 푸에블로호 피격납치사건은 이 시기 냉전체제 속의 한반도의 긴장된 상황을 잘 설명해 준다.

한국과 독일연방공화국은 마침내 1969년 1월 동베를린 사건으로 훼손된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한다. 독일 측 연방대통령 특사인 프랑크(Frank) 박사가 한국을 방문하여 서울과 본 사이의 긴장된 관계가 개선되었는데 양국 간의 정치적, 외교적 균열을 종식시키는 과정은 거의 3년이 걸렸다고 볼 수 있다.

36) Bestand 37, Band 416. Abteilung I. IB5-82.70/92.23 Bonn, den 1. Feb. 1968.

37) Bestand 37, Band 416. Prot 2-88/2/68 den 4. Januar 1968.

38) MfAA[Ministerium für Auswärtige Angelegenheiten], C1086/70. official communiqué from the North Korean foreign ministry on September 19, 1967.

5. 마무리

동베를린 사건은 1960년대 동서냉전과 남북한 간의 냉전이 치열할 당시에 일어난 한국과 독일연방공화국 사이에 일어난 외교적으로 불행한 스캔들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냉전체제 속에서 공산주의에 함께 대항해야 한다는 슬로건 하에 사건 초기에 독일연방공화국의 협조를 구하려고 했으나 독일은 주권국가로서 외국의 정보기관에 의해 주권침해를 당한 사안에 대해 굉장히 불쾌함을 느꼈고 독일 연방정부는 한국 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하며 독일에서 독일의 주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저지름으로 독일 국내의 악화된 여론의 압박을 피해갈 수 없는 곤혹스런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 외교적 압박은 그대로 한국 정부에 전가되었고 정치외교적인 사안을 넘어 경제적인 원조까지 연계되어 있던 한독관계는 한국 정부가 사실상 외교적 압박에 굴복하면서 정상화에 돌입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동베를린 사건과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못했던 관련자들의 사건개입상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당시 사건의 해결을 위해 독일 연방정부가 강하게 한국 정부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본 사건의 외적인 상황을 최근에 추가 발굴한 사료에 의존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기술함으로 이전의 관련 연구를 보완하려고 시도했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구동독의 선전매체가 일부 관여한 것으로 보아 북한과 구동독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며 공조를 하였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차후의 연구과제로 미루어 둔다.

참고문헌

- 김명섭/양준석(2013). 1967년 “동백림사건” 이후 한독관계의 긴장과 회복: 비밀해제된 한국외교문서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 35, no.1, 5-39.
- 성상환(2010). 북한과 구동독의 외교관계에 대한 분석적 고찰: 1950년에서 1960년까지의 독일 외무성사료를 중심으로. 독어교육 제49집, 399-421.
- 양준석(2009). 동백림 사건의 국제정치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이정민(2014). 동백림사건을 둘러싼 남한정부와 서독정부의 초기 외교갈등. 사림.
vol. no. 50. 67-93.

재단법인인글릭아우프회(2009). 과독광부 45년사: 1963-2008.

PAAA(Politisches Archiv des Auswärtiges Amtes in Berlin: PA. Bestand 83,
Entführung von Südkoreanern au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and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June 1967 - 1970).

Seong, Sang Hwan(2005). An archive-based analysis of the East-Berlin Affair
(June 1967- 1970). *SNU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Center for
Educational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14: 1-19.

Seong, Sang Hwan(2018). Korean-German Relations from the 1950s to the 1980s:
Archive-Based Approach to Cold War-Era History. In: J. Cho & L.
Roberts (eds.) *Transnational Encounters between Germany and Korea*.
New York: Palgrave Macmillan. 133-157.

■ Zusammenfassung

Eine Untersuchung der Spionageaffäre in Ostberlin während des Kalten Krieges

- Eine Analyse der politisch-diplomatischen Beziehungen zwischen Korea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asierend auf den freigegebenen Dokumenten aus dem Politischen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und dem Bundesarchiv

Seong, Sang Hwan (Seoul National Univ.)

Die vorliegende Arbeit thematisiert die Entführung von siebzehn Südkoreanern au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urch den südkoreanischen Geheimdienst, welche sich während des Kalten Krieges ereignete und die bis heute als beispielloser diplomatischer Skandal zwischen Korea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verstanden werden kann. Während die südkoreanische Regierung zu Beginn der Vorfälle noch bemüht war, die Bundesregierung als Verbündeten im Kampf gegen den Kommunismus zu gewinnen, distanzierte sich die Bundesregierung, da sie in der Entführung eine ernsthafte Verletzung der deutschen Hoheit sah. Nicht nur warf sie dem koreanischen Geheimdienst kriminelles Verhalten und eine Verletzung der deutschen Souveränität vor, zudem beschuldigte sie die koreanische Regierung eines schweren Verstoßes gegen das Völkerrecht. Erst nachdem sich die koreanische Regierung dem politischen und diplomatischen Druck von Seiten der Bundesregierung ergab, begann sich das Verhältnis zwischen den Ländern allmählich zu normalisieren. Den Akten des politischen Archivs des Auswärtigen Amtes kann eindeutig entnommen werden, dass sich die Bundesregierung damals gezwungen sah, einen starken politischen Druck auf die koreanische Regierung auszuüben, um den Vorfall zu einem Ende zu bringen. Mit Hilfe von freigegebenen Dokumenten aus dem Politischen Archiv des Auswärtigen Amtes und dem Bundesarchiv werden in der vorliegenden Arbeit die in der Entführung involvierten Personen sowie der Grad ihrer

Beteiligung kritisch beleuchtet. Diese archivbasierten Daten wurden in vorherigen Studien nicht zur Genüge berücksichtigt. Ziel dieser Arbeit ist es unter anderem aufzuzeigen, inwiefern frühere relevante Studien mit Hilfe der kürzlich entdeckten historischen Quellen ergänzt werden können.

핵심어: 동베를린 사건, 동백림 사건, 한국과 독일의 외교관계, 한반도 냉전, 남한과 북한, 동독과 서독, 국제관계

Stichwörter: East-Berlin Espionage Affair,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Germany, Cold War Era History, East Germany and West Germany, Kalter Krieg, kidnapping of South Koreans, Entführung

<논문투고일: 2020.12.23. 논문심사일: 2020.12.24. 게재확정일: 2020.12.28.>